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6956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200536	고동진의원 등 108인	'24.6.17.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2200586	서지영의원 등 13인	'24.6.18.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2201966	강유정의원 등 12인	'24.7.18.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한편,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음.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정부가 창작·유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인 ‘콘텐츠’의 범위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9조제1항).
- 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9조의 2 신설).
- 다.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 라.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 마.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콘텐츠”를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신청은”을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이”를 “의뢰 또는 신청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33조제3항 중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

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을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4(분쟁조정の特례)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

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조정위원회는”을 “조정이”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를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로,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제29조제6항에”를 “제29조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u>콘텐츠</u> 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 ---- <u>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u> ----- ----- ----- -----.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u>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u>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u> <u>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③ <u>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u>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
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
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
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
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삭 제>

<삭 제>

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

<신 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⑤·⑥ (생략)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의뢰 또는 신청이-----
-----.

④ -----

-----.

1.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⑤·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조정 의 효력) ①·② (생략)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신 설>

제33조(조정 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④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

<신 설>

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

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
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
건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
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
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
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
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

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p>제34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생략)</p> <p>② <u>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u>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⑧ <u>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조정이-----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u></p> <p>③ <u>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u>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u></p>	<p>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제3항에----- ----- ----- ----- ----- -----</p>

로 본다.	-----.
-------	--------